

【 2017.7.14(금) 강원일보 】

◇오인철강원건설단체연합



회장은 14일 오후 1시 횡성 웰리힐리리조트 회의실에서 강원건설단체연합

회 정기회의를 개최.



대한건설협회 도회 임시총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오인철)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평창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2017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총사업비 2조1064억원

예비타당성 대비 433억 1
도, 9월까지 사업비 협의
운행횟수 하루 24~42회

속보=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
도의 기본계획이 마무리(본지 7
월 13일자 1·3면)된 가운데 총사
업비가 2조1064억원으로 당초

예비타당성 당시(2조631억원)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B/C(비용편익)는 0.79에
서 0.85로 높아져 오히려 사업성
이 더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확정
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
조1064억원으로 예타보다 433
억원 증가했다. 총연장은 92.34

km로 예타당시 확정된 거리
(93.95km)보다 다소 줄었다. 정
거장은 백담사역이 신설되면서 5
개소에서 6개소로 늘었다.

단선으로 운행되는 춘천~속
초 철도는 당초 1일 36회 운행하
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1일 24~
42회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운전시차는 당초 30분에서 26~
45분으로 변경됐다. 철도 노반의
경우 터널은 73.58km로 전체구
간의 79.7%를 차지한다. 사실상
지하철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교량은 4.47km(4.8%)다.

도는 빠르면 9월까지 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마칠 계
획이다. 이어 10월까지 기본계획
을 수립, 고시한데 이어 11월에는
입찰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도
는 올해 6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도 기본·실시설계예산으로
10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춘천~속초철도 중 춘천
구간은 약 6.2km가 지하화로 건
설된다. 인제는 원통북면에 인제
역, 백담사 인근에 백담사정거장
이 각각 신설된다. 양구는 역사
위치를 놓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
는 가운데 양구하리 일대가 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박지은

▶관련기사 4·11면

9월 시설물유지관리협 도회장 선거

제3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
회장 선거가 오는 9월 7일 치러진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
는 13일 도회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
회 회의 열고 제3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제3대 도회
장 선거일정은 다음달 23일 공고하고 이
날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한편 현재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광표 춘천 광명건축 대표가 차기
도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신관호

강원상품권 사업 실효성 논란 지속

노인 일자리 수당 상품권 지급 관련
도의회 “참여의지 꺾어” 역효과 지적

속보=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강원상
품권 사업 추진효과 논란(본지 7월 12일
자 3면)이 강원도의회에서 지속되고 있
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
영기)는 13일 도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
고에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
는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대한 질
의를 별도로 실시했다. 조영기 위원장은
상품권을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단으로 지
급하는 것과 관련, “해당 예산은 첨예한
논란 끝에 조건부 승인했다. 문제가 생
길 경우 보류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답변
이었다”며 “시·군이나 사회단체 동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석주(영월)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상품
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실제 시장에서 얼
마나 순환하겠느냐.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수 없다”며 “현금으로 받
을 때 보다 일자리사업 참여의지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혁열(강릉) 부
의장은 “강원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만 수십억이다. 부대비용만 들고 역외자
금 유출의 당초 취지는 달성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통한 노
인일자리 사업확대에 대비한 수급 문제
도 제기됐다. 장석삼(양양) 의원은 “일
선 시·군에서 지금도 참여 인원을 채우
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
처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시
택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며 “9월 중

어르신일자리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으로 참여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사회문화위는 도내 노인요양원 곳곳
에서 무연고 입소자 사망자 유산의 부당
사용이 드러난데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
했다. 유정선(비례) 의원은 “요양원 입
소자의 정확한 인원과 연고 여부 등을 확
실히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
다”며 “경찰과의 공조 등으로 요양원 입
소자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
라”고 했다. 김어진



인제 백담사역 신설 '입장차' ... 속초 지역발전 '기대감'

인제 용대리 "지역경기 도움"
기존 예정지 원통 "효과 반감"
속초 동광사 일원 결정 환영
"과거 개발사업 백지화 보상"
도 지역의견 최대 반영 입장
양구 "지역발전 차원 신중 결정"



춘천~속초동서고속철 기본계획안이 제출됐다. 기본계획에서 인제 백담사 인근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추가 간여역이 들어서는 용대리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반면 기존 역사에 정지인 원통지역 주민들은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백담사 인근

속박업체와 식당가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백담사 인근 국도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9)씨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국도 44호선 통행량이 급감, 지역상인들의 근심이 컸다"며 "역이 설치되면 관광객이 늘어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역사 설치로 기대

를 모았던 원통지역 주민들은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동서고속철 속초 역사가 노학동 소야별 동광사 일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해당지역은 지난 2010년 속초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백지화된 지역으로 한차례 실망을 겪었던 주민들은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윤광훈 속초시변영회장은 "토지거래약하기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의 소유주와 지정되지 않는 소유주들 간의 상대적 실망감을 최소화 하기위해 지정

구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서고속철도 역사위치가 조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양구지역에서는 송청리 지역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구군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동서고속철 노선과 역사위치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군과 비행장이전문제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양구읍을 제외한 제2선거구(남면·동면·방산면·해안면) 출신 군의원들이 "거시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의견도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주목된다. 한편 김중호 화천군변영회장은 "철도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가 들어서는 간동면과 화천읍을 연결하는 461번 지방도의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은·지역종합

올림픽 '전통정자' 입찰 자격 논란

강개공, 알펜시아내 설치 공교
토목건축·수리 등 면허보유조건
도내 전문업체 참여 축소 반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내 건립되는 '전통정자' 공사입찰을 놓고 강원도개발공사와 도내 종합문화재수리업체 사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도개발공사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한식 목구조 형식의 전통정자(연면적 44.1㎡)를 설치하기 위해 4억1200만원 규모의 공사입찰을 지난 7일 공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입찰 참가자격이다. 도개발공사는 입찰 참여업체를 토목건축공사업과 종합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면허를 동시 보유하거나 건축공사업과 종합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면허를 모두 가진 도내 업체로 제한했다. 이같은 제한에 종합문화재수리업만 전문으로 하는 도내 업체들이 입찰자격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도내 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업체들은 이번 전통정자 설치공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면허만 있어도 충분한 공사인데도 도개발공사가 공사참여 업체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통정자

설치작업에 필요한 토목 및 건축 공사(단열과 기초 시멘트 공사 등)는 전체 공정의 0.89%에 불과한데도 입찰 참가자격에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개발공사는 이번 공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체만으로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올림픽 관련 시설인 만큼 입찰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14일 진행하려던 개찰일정은 취소했다"고 말했다. 신관호

“하반기 건설투자 ‘9.9%→3.7%’로 뚝”

韓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2.8%로 상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지난해 달성한 수준인 2.8%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성장률이 3%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건설투자 증가세는 하반기부터 둔화돼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13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린 데 이어 추가로 상향한 것이다. 한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경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7면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추경이 집행되면 올 경제성장률이 최대 3%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경우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던 건설투자 증가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9.9%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3.7%로 축소될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내년 상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2.2%로 예상된다.

한은은 또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됐다.

권해석기자 haeseok@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풍성

20일 건설회관서 기념식
유공자 포상·비전 선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건설 70년,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 기념식에선 건설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과 건설산업 미래비전 선포식이 열리고, 2부 특별 행사에서는 지난 70년 건설산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건설산업의 미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편찬한 <한국건설통사> 봉정식과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건설산업 발전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본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건설 유관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길에 떡과 음료수를 직접 나눠

주는 출근맞이 행사와 함께 새로운 70년을 다짐하는 임직원 퍼포먼스를 벌인다.

한편 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은 한국 건설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미래 70년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역사를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건설통사>와 건설산업의 토대를 만들어 온 인물을 돌아보는 <한국건설 인물사>를 편찬한다.

대국민 이벤트도 풍성하다. 지난 4월15일 <건설경제신문>이 주최한 ‘국민과 함께 뛰는 건설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건설을 주제로 한 창작문학·웹툰을 공모하는 ‘건설문학상’(5.22~9.15) △우리 주변에 있는 독특한 건축물과 역사적 가치나 특이한 이력이 있는 건축물 사진을 공모하는 ‘우리 동네 건축물 인증사진 콘테스트’(7.3~8.31) △건설인 열린을 약회(7.27) △미래건설산업 어린이 리그(LEGO) 경진대회(11월 예정)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김태형기자 kth@

상반기 강원지역 건설사 수주봤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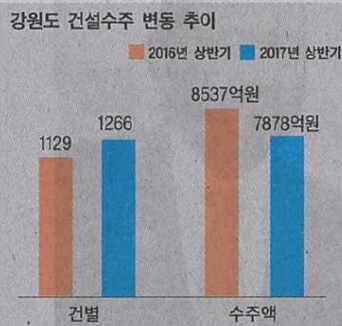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

대형 프로젝트 종료 영향
강릉·삼척 화력 재검토에
공공 물량 확대 여지 적어
하반기도 위축 가능성 높아

올해 상반기 강원도 건설사의 수주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전체 건설 수주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형 건설프로젝트가 대부분 종료되면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회 회원사의 건설 수주액은 7878억3000만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수주액 8537억2000만원보다 7.7%가량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도내 공공공사 수주액은 1조4832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2984억원보다 14% 정도 늘었다.

반면 수주 건수는 다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도 건설업계의 수주 건수는 126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수주 건수 1129건보다 12% 정도 증가했다.

수주 건수는 늘었지만 수주액이 감소한 것은 올해도 건설 시장이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형성된 탓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와 철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의미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도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프로젝트를 찾지 못한 결과다.

하반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당장 도

내에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가 설계에 들어가는 등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공사 발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와 삼척 화력발전소 등 도내 대형 발전소 건설 사업은 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추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전체적인 공공 공사 발주 물량도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없다는 전망이 많다. 건축 등 민간분야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택경기가 하강할 조짐이 보이면서도 내 주택 건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 민간 건축 시장은 낙찰률이 50% 선까지 내려가는 일도 허다해 수주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에년과 비교해 특별히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면서 “민간 건축 시장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업 지속적 성장해야 지역경제 살아”

“제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벽감종합건설 대표)은 “제주는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30.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산업은 해저리 현상 등으로 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고 관광사업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것처럼 외부 요인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반면 건설업은 서비스업, 농림업업 다음으로 비중이 크고 정책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5년간 지역 건설경기를 떠받쳤던 민간 주택 부문이 침체되면서 제주의 건설지표들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었다. 건축이 56%, 토목이 34% 감소했다. 공공 부문이 37%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65% 줄었다.

이 회장은 “민간주택 수주는 주택공급 과잉, 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해외투자 유치 사업도 답보 상태여서 선행지표인 도내 건설 수주 감소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SOC 물량 감소와 신규 투자사업이 줄어들고 수익률도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지원할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다. 이 회장은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는 것처럼 국가기관 및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도 이를 확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에 지역사 참여 넓혀줘야 생존 공공물량 늘리는데 힘쓸 것

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서 발주된 공사 중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은 56%였다. 그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발주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방안은 대규모 투자 유치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다. 실제 제주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사업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례로 2조2000억원 이상 투자되는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인 제주신화역사월드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공사금액 기준으로 50% 참여하고, 채용 인원의 80% 이상을 도민으로 우선 고용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다른 투자 유치사업에도 제주와 긴밀히 협의해 시공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공사비는 빠듯하게 반영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간접비 부담은 늘고 있다. 공공공사 원가산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지자체의 계약심사제도는 사실상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회장은 “예전에는 공공공사를 낙찰받으면 축하 전화를 받기 바빴지만 요즘엔 실행금액부터 걱정해야 한다”며 “낙찰률 상향을 포함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지역건설 공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 지원, 고부가가치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주 공공공사 물량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신항은 2030년까지 2조 4520억원이 투입된다. 크루즈 22만t급 4선석과 여객선 부두 9선석, 방파제 및 방파호안(4.91km) 설치로 관광객 및 크루즈 여객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제주2공항 건립은 지역 최대 현안이다. 건설비만 4조900억원이고 생산유발효과는 12조원이 넘는다. 이 회장은 “절차적 문제로 제주도와 지역주민 간 대립하고 있지만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더 이상 머뭇거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제주농업융수 광역화 사업(1447억원), 제주지역 수돗물 우수율 제고사업(3900억원)이 있다. JDC는 오는 2021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한다.

이 회장은 “지금의 건설산업은 위기라고 하지만 각 주체들이 합심해 지혜를 모은다면 새 성장동력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